

의대 증원 배분 완료, '지방 올인' 수준

2000명 중 82%가 비수도권...서울은 '0명' "지역필수의료 확충, 방향성 확실히 보여" "증원없는 여지도 없어...유인 정책 보완"

정부가 2000명 증원분의 상당수를 비수도권에 배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중 82%에 달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했고 나머지 18%인 361명은 경기와 인천에 할당했다. 서울 지역 대학은 아예 증원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의료 격차를 보이는데,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이 지난 15일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5명인데 비해 경북 1.4명, 충남과 충북 각각 1.6명, 전남과 울산 각각 1.7명, 경남 1.8명에 그친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중증환자 치료 격차도 나타나는데, 입원 환자 사망비는 서울이 0.93명인데 충북 1.31명, 경북 1.25명, 울산 1.17명, 경남 1.16명 등으로 비교적 높다. 중증·응급 환자 중 하나인 뇌혈관질환 사망비 역시 서울이 0.95명일 때 충북 1.29명, 강원 1.19명, 경북과 충남 각각 1.17명 등으로 서울과 격차를 보였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 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여러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 때문이고 증원은 인력은 필요한 곳에 가야한다는 게 전제조건이었는데 지방 위주로 증원을 하는 건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건은 증원한 인원이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느냐 여부에 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인재를 뽑아 교육과 수련을 지키기 위해 해당 지역에 남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지부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이 지역에서 교육과 수련을 받을 경우 해당 지역에 남을 확률이 82%를 넘는다. 정부도 이를 위해 지역에 남으면 병원과 계약해 교수 자리를 갖도록 구조를 만들고 있다.

또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일환으로 의료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절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할 방침이다.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3조원, 심뇌혈관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연계에는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의료와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 및 지역 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수가 확대 및 지역 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추진한다.

정 교수는 "의대 증원 하나만으로 지역으로 간다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정부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증원이 없으면 그 쪽(지역필수의료)으로 갈 여지조차 없다. 정부가 여러 유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보완이 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과 수련이 질도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는 "예과 후 본과 사이 2년

단위: 명	소재지	학교명	현재	2025학년도	증감
거점 국립대	서울	서울대	135	⇒ 135	0
	부산	부산대	125	⇒ 200	↑75
	대구	경북대	110	⇒ 200	↑90
	광주	전남대	125	⇒ 200	↑75
	대전	충남대	110	⇒ 200	↑90
	강원	강원대	49	⇒ 132	↑83
	충북	충북대	49	⇒ 200	↑151
	전북	전북대	142	⇒ 200	↑58
	경남	경상국립대	76	⇒ 200	↑124
	제주	제주대	40	⇒ 100	↑60
소규모 의대 (50명 이하)	인천	인화대	49	⇒ 120	↑71
	부산	동아대	49	⇒ 100	↑51
	대전	건양대	49	⇒ 100	↑51
	강원	강원대	49	⇒ 132	↑83
	강원	가톨릭관동대	49	⇒ 100	↑51
	충북	충북대	49	⇒ 200	↑151
	경북	동국대 분교(경주)	49	⇒ 120	↑71
	인천	가천대	40	⇒ 130	↑90
	경기	이주대	40	⇒ 120	↑80
	경기	성균관대	40	⇒ 120	↑80
경기	차의과대(여의원)	40	⇒ 80	↑40	
대구	대구가톨릭대	40	⇒ 80	↑40	
대전	울지대	40	⇒ 100	↑60	
울산	울산대	40	⇒ 120	↑80	
충북	건국대 분교(충주)	40	⇒ 100	↑60	
충남	단국대(천안)	40	⇒ 120	↑80	
제주	제주대	40	⇒ 100	↑60	

자료: 교육부

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준비할 기간은 있다"며 "해부학, 생리학과 같은 기초 의학이 문제인데 정부가 증원을 하면 오히려 각 의대에 기초의학 교수를 더 뽑고 기초교육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의과대학인증평가원에서 기초 교육과 관련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선해서 그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하면 기초교육 질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증원이)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면기자



나주경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나주경찰서는 지난 19일 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경찰발전협의회(회장 윤남철)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나주=송준표기자



담양경찰, 협력단체 연합간담회 개최

담양경찰서가 경성·참여치안의 일환으로 경찰서 협력단체 간 치안정책 등의 논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단체 연합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무안경찰, 치매실증 예방 위한 민·경 참여치안 전개

무안경찰서는 치매 증상을 미리 발견하고 사전에 치매노인의 실증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하여 '치매를 세상 밖으로...무안 POL 두드림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강진소방,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

강진소방서는 지난 18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소방, 긴급구조대응 기관장 간담회 개최

장흥소방서는 지난 19일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8개 기관이 모여 재난대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대응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광주 동부소방,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치료 위한 헌혈증 기부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19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헌혈 증서를 모아 백혈병, 소아암 환자들의 수술 및 치료를 위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헌혈증서 30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안녕 나비야"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를 한 달여 앞둔 20일 오후 전남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나비 날리기 행사에 앞서 나비를 관찰하고 있다.

광주 도심 야산 불...임야 3500㎡ 타

대낮 광주 도심 야산에서 난 불이 1시간여 만에 꺼졌으나 임야 3500㎡가 탔다. 바람을 타고 불길의 번질 우려가 커 인접 주택가 주민 6명도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께 광주 동구 학동 미양산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은 소방·산림 당국이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3500㎡(0.35ha)가 타거나 그을린 것으로 추정된다. 산과 인접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 6명은 긴급 대피령에 따라 잠시 몸을 피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이 민가로 불길이 번지는 길목을 차단, 대

피 인원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화 작업엔 산림청·소방·경찰 헬기 4대와 진화장비 37대, 소방관·산불전문진화대원·동구청 직원 등 235명이 투입됐다. 전방위 진화 작업 덕분에 큰 불길은 이날 오후 2시 14분께 잡혔다.

불은 주택가 인접 임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초속 4m(시속 14km)의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진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잔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변용일기자



'영유아 긴급 돌봄' 광주 시간제 어린이집 늘린다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부모·부모의 급한 상황으로 1~2시간 정도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기관이 확대됐다.

광주시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참여 어린이집을 기존 44개반에서 78개 반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들 긴급하게 집 근처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시간당 이용료는 5000원으로 국가와 광주시가 3000원을 지원하며 보호자는 2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용 대상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이며 독립반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통합반은 0~2세 반별 정원 내에서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참여 기관은 0~2세 통합반은 서구 금호동·남구 송암동·북구 양산동·광산구 하남동에 각 1곳씩 4곳을 운영한다.

독립반은 동구 2개소, 서구 6개소, 남구 6개소, 북구 11개소, 광산구 15개소 등 총 36개소 40개반을 이용할 수 있다.

독립반은 반별로 3명까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이용 할 수 있으며 통합반은 기존 어린이집 반별 정원내에서 오전 9시~오후 4시 아이 돌봄을 맡길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조부모·부모는 이용 14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인식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과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당일 예약은 이용 당일 낮 12시까지 신청 할 수 있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은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할 경우 1~2시간 정도 집 인근의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라며 "추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운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선욱기자